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ecember, 2022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CONTENTS

목차

##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1. 법률 뉴스

01. 중국은보감회 <외국은행 지점의 종합감독관리 평가방법> 발표
02. 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 개인정보의 국경간 처리활동 보안인증규범 발표
03. "양고"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하는데 관한 사법해석 공동 발표
04. 공신부 <산업 및 정보기술 분야의 데이터보완 관리조치> 발표
05. 최고법, 중의약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06. 최고법 청위금융법원 사건 관할 사법해석 발표
07. 국가약감국 <의약품 온라인 판매 감독관리방법> 4가지 문서 발표

### 2.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외국은행 지점의 종합감독관리 평가방법(시행)>
02. <사이버보안표준 실무지침-개인정보 국경간 처리활동 보안인증규범 V2.0>
03.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
04. <산업 및 정보기술 분야의 데이터보완 관리조치 (시행)>
05. <중의약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06. <청위금융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
07. 《<의약품 온라인 판매 감독관리방법>의 이행에 관한 통지》
08.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규정 부록 6: 의약품 소매 유통 품질 관리>
09.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목록(제1판)>
10.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기 및 보고 업무 규범에 관한 공고>

### 3. 노동법문답

근무시간에 관한 질문 해답

## 1. 법률 뉴스

### 01. 중국은보감회 <외국은행 지점의 종합감독관리 평가방법> 발표

출처: 중칭망

**[내용개요:** 중국은보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은행 지점의 종합감독관리 평가방법(시행)>(이하 <방법>)을 발표하였다. <방법>은 총 36 조로 총칙, 핵심요소 평가, 본사 지원 평가, 종합감독평가, 평가절차, 평가 결과 적용, 부칙 등 7 개 장으로 구성된다. <방법>은 일반적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종합감독 평가업무를 표준화하고 외국은행 지점의 등급에 대한 기본정의, 적용범위, 주요원칙, 평가요소, 기본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 원칙 규정을 제정하였다. <방법>에 따르면 첫째, 외국은행 지점의 감독평가 기본체계를 명확히하고 둘째, 평가 절차를 표준화하며 셋째, 평가 결과의 운용에 대해 지도한다고 하였다. <방법>의 발표와 시행은 감독관리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며 외국은행 지점이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위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

据银保监会官网消息，为进一步完善外国银行分行监管评级体系，合理配置监管资源，加强分类监管，促进外国银行分行稳健运营，近日，中国银保监会发布《外国银行分行综合监管评级办法(试行)》(下称《办法》)。

《办法》共三十六条，包括总则、核心要素评级、总行支持度评估、综合监管评级、评级程序、评级结果运用、附则等七个章节。《办法》从总体上对外国银行分行监管评级工作进行规范，对外国银行分行评级的基本定义、适用范围、主要原则、评级要素、基本程序、评级结果运用等作出了原则性规定。

《办法》一是明确外国银行分行监管评级基本体系。外国银行分行综合监管评级包括核心要素评级和总行支持度评估两部分，其结果以核心要素评级结果为基准，总行支持度评估作为

调整项。其中，核心要素评级包括风险管理、营运控制、合规性和资产质量等 4 项评级要素；总行支持度评估包括总行的经营环境风险、总行的财务状况和管理能力以及总行对在华分行的支持度等 3 项评估要素。

二是规范评级程序。外国银行分行综合监管评级程序包括收集信息、初评、复评、审核、评级结果反馈、评级结果运用、动态调整、后评价等环节。其中，年度监管评级工作结束后，外国银行分行风险发生重大变化的，监管机构可对其监管评级结果进行动态调整。

三是对评级结果运用作出指导。强调监管评级结果是作为衡量外国银行分行经营状况、风险程度和风险管理能力，制定监管规划，合理配置监管资源，采取监管措施和行动，开展市场准入的重要依据；明确监管机构应根据监管评级结果对外国银行分行采取分类监管措施。

《办法》的发布和实施，是对外资银行监管的进一步制度化和规范化，是对中国特色监管道路的一次有益的探索，为加强外国银行分行监管、发挥监管评级作用提供了制度保障，有利于合理分配监管资源、增强监管能力，有利于引导外国银行分行完善风险管理体系，持续提升风险治理水平。

## 02. 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 개인정보의 국경간 처리활동 보안인증규범 발표

출처: 신안표위

**[내용개요:** 국가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는 <사이버보안표준 실무지침-개인정보 국경간 처리활동 보안인증규범 V2.0>(이하 <지침>)을 발표하였다. <지침>은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자, 해외접수자의 개인정보 국경간 처리활동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주체의 권익보장 등 내용을 포함하며 인증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국경간 처리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국경간 처리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자와 해외접수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12月16日, 全国信息安全标准化技术委员会秘书处发布《网络安全标准实践指南—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安全认证规范 V2.0》。

认证规范 V2.0 指出, 开展跨境处理活动的个人信息处理者申请个人信息保护认证应符合 GB/T 35273《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规范》和本文件的要求。本文件包括基本原则、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在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的个人信息保护、个人信息主体权益保障等方面内容, 为认证机构对个人信息处理者的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开展认证提供依据, 也为个人信息处理者规范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提供参考。

### 1 适用情形

本文件作为认证机构对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进行个人信息保护认证的认证依据, 也为个人信息处理者规范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提供参考。

### 2 认证主体

申请认证的个人信息处理者应取得合法的法人资格, 正常经营且具有良好的信誉、商誉。

跨国公司或者同一经济、事业实体下属子公司或关联公司之间的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可由境内一方申请认证，并承担法律责任。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第三条第二款规定的境外个人信息处理者，可由其在境内设置的专门机构或指定代表申请认证，并承担法律责任。

### 3 术语定义

#### 3.1 个人信息主体

个人信息所标识或者关联的自然人。

#### 3.2 个人信息处理者

在个人信息处理活动中自主决定处理目的、处理方式的组织或个人。

#### 3.3 境外接收方

位于中华人民共和国境外并自个人信息处理者处接收个人信息的组织或个人。

### 4 基本原则

a) 合法、正当、必要和诚信原则。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在跨境处理个人信息时应满足法律法规的规定，按照约定目的并采取对个人信息权益影响最小的方式处理个人信息，遵守合同、协议等具有法律约束力文件的约定和承诺，不得违背约定和承诺损害个人信息主体的合法权益。

b) 公开、透明原则。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在跨境处理个人信息时应满足处理规则公开、处理过程透明要求，及时向个人信息主体告知境外接收方的名称或者姓名、联系方式，个

人信息跨境处理的目的、范围和处理方式，以及权利、行使权利的方式和程序等，确保个人信息主体了解自身个人信息的跨境处理情况。

c) 信息质量保障原则。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在跨境处理个人信息时应保障个人信息的质量，避免因个人信息不准确、不完整对个人权益造成不利影响。

d) 同等保护原则。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在跨境处理个人信息时均应采取必要措施，保护所处理个人信息的安全，确保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达到《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规定的个人信息保护标准。

e) 责任明确原则。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应履行法律法规规定的责任义务，在跨境处理个人信息时应保障个人信息主体权益，并指定境内一方、多方或者境外接收方在境内设置的机构对境外接收方损害个人信息权益的个人信息处理活动承担民事法律责任。

f) 自愿认证原则。鼓励开展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的个人信息处理者自愿申请个人信息保护认证，充分发挥认证在加强个人信息保护、提高个人信息跨境处理效率方面的作用。

### 03. "양고"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하는데 관한 사법해석 공동 발표

출처: 인민망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이하 <해석>)을 발표하여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해석>은 총 12개 조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규정을 어기고 위험작업을 하도록 타인을 강요하거나 조직한 죄와 위험작업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안전평가 중개조직원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에 주의를 기울인다. 셋째, 생산안전 침해범죄를 법에 따라 징벌할데 대한 형사정책 및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연결사업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명확히 한다고 하였다. <해석>은 규정을 어기고 위험작업을 하도록 타인을 강요하거나 조직한 죄의 행위방식, 위험작업죄의 범죄주체 범위, 객관적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인정 등을 명시하여 각급 사법기관이 위 죄목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생산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범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联合发布《关于办理危害生产安全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法释〔2022〕19号，以下简称《解释》），自2022年12月19日起施行。

据悉，《解释》针对现阶段惩治危害生产安全违法犯罪的新情况新问题，对如何正确适用法律、准确把握刑事政策作出了规定，确保司法机关合理确定刑事处罚范围，更加准确有效打击危害生产安全犯罪和相关联的中介组织人员等犯罪，为经济社会协调健康发展提供有力司法保障。

《解释》强化对强令、组织他人违章冒险作业罪和危险作业罪的从严打击。实践中，强令、组织他人违章冒险作业行为极易引发重特大事故，社会危害严重，应当依法严惩。刑法对强令、组织他人违章冒险作业罪规定了较重的法定刑，最高可判处有期徒刑十五年，但由于适用标准不够明确，司法实践中对本罪适用较少。《解释》立足于解决实际问题，明确规定了强



令、组织他人违章冒险作业罪的行为方式，以及危险作业罪的犯罪主体范围、客观方面构成要件的具体认定等内容，为各级司法机关正确适用上述罪名有效惩治危害生产安全犯罪提供规范依据。

《解释》注重对安全评价中介组织人员犯罪的依法惩治。近年来，安全评价中介组织人员提供虚假证明文件或者出具证明文件重大失实问题时有发生，是引发生产安全事故的重要原因。依法惩治安全评价中介组织人员犯罪，对于及时消除安全风险隐患、有效遏制重特大事故发生，具有重要意义。《解释》明确了安全评价中介组织人员犯提供虚假证明文件罪和出具证明文件重大失实罪的定罪量刑标准，同时对如何正确认定刑法规定的故意提供虚假证明文件行为作了列举性和提示性规定，以利于司法实践中依法认定犯罪，准确确定刑罚打击范围。

《解释》进一步明确依法惩治危害生产安全犯罪的刑事政策以及行政执法与刑事司法衔接工作要求。危险作业罪属于轻罪，构成犯罪不要求造成重大事故后果，适用本罪尤其需要注意宽严相济，切实防止刑罚打击面过广。《解释》明确，实施危险作业犯罪行为，积极配合有关部门采取措施消除事故隐患，确有悔改表现，认罪认罚的，可以依法从宽处罚。《解释》还对行政执法与刑事司法衔接工作作了原则性规定，要求人民法院、检察机关对于依法被不起诉或者免于刑事处罚的危害生产安全犯罪和关联犯罪的犯罪人，需要给予行政处罚、政务处分或者其他处分的，要依法移送有关主管机关处理，确保行政执法与刑事司法程序有效衔接、法律责任落实到位。

据介绍，《解释》施行后，最高法、最高检将指导地方各级人民法院、人民检察院，准确适用刑法、刑事诉讼法和《解释》的有关规定，坚持依法从严惩处总体原则和宽严相济刑事政策，进一步做好危害生产安全犯罪案件审判工作，切实维护生产安全，保障人民生命财产安全。

#### 04. 공신부 <산업 및 정보기술 분야의 데이터보완 관리조치> 발표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산업정보화부는 <산업 및 정보기술 분야의 데이터보완 관리조치 (시행)>(이하 <조치>)를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조치>의 주요내용은 7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산업 및 정보화 분야의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자의 개념을 확정하고 감독관리 범위와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데이터 분류 및 계층적 관리, 중요 데이터 식별 및 등록 관련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셋째, 다양한 등급의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 전송, 제공, 공개, 파기, 수출, 이전, 위탁처리 등 단계를 중심으로 상응한 안전 관리와 보호 요구사항을 제기한다. 넷째, 데이터 안전감시 및 조기경보, 위협정보 보고 및 공유, 비상 대응, 고소 고발수리 등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데이터보안 모니터링, 인증 및 평가 관련 요구를 명확히 한다. 여섯째, 감독 및 검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일곱째,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과 징벌조치를 명확히 한다고 하였다.]

工信部近日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共八章四十二条，主要内容包括界定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和数据处理者概念，明确监管范围和监管职责；确定数据分类分级管理、重要数据识别与备案相关要求；针对不同级别的数据，围绕数据收集、存储、加工、传输、提供、公开、销毁、出境、转移、委托处理等环节，提出相应安全管理和保护要求等七个方面，自2023年1月1日起施行。

管理办法明确，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包括工业数据、电信数据和无线电数据等。工业数据是指工业各行业各领域在研发设计、生产制造、经营管理、运行维护、平台运营等过程中产生和收集的数据。电信数据是指在电信业务经营活动中产生和收集的数据。无线电数据是指在开展无线电业务活动中产生和收集的无线电频率、台（站）等电波参数数据。

工信部有关负责人表示，管理办法重点解决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谁来管、管什么、怎么管”的问题，构建了“工业和信息化部、地方行业监管部门”两级监管机制，以数据

分级保护为总体原则，要求一般数据加强全生命周期安全管理，重要数据在一般数据保护的基础上进行重点保护，核心数据在重要数据保护的基础上实施更加严格保护。

与此同时，工信部将建立数据安全风险监测机制，组织制定数据安全监测预警接口和标准，统筹建设数据安全监测预警技术手段，形成监测、预警、处置、溯源等能力，与相关部门加强信息共享。

## 05. 최고법, 중의약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출처: 법치망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중의약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세 부분으로 나뉘고 총 16 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그 중, 중의약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에 대한 재판기능 강화와 사법수준제도를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로 중의약 특허, 상업 마크, 영업 비밀 및 국가 비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중의약 자원, 중의약 품종 및 기타 분야의 사법 보호를 포함하고 중의약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며 중의약 혁신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중의약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그 목적은 중의약의 주요 영역과 주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중의약 지적재산권의 사법 관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最高人民法院关于加强中医药知识产权司法保护的意見》（以下简称《意見》）12月21日由最高人民法院对外发布。《意見》旨在促进中医药传承精华、守正创新，推动中医药事业和产业高质量发展。

### 满足中医药产业事业司法需求

“知识产权司法保护是中医药保护的重要方式。”最高法民三庭负责人介绍，《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和《“十四五”中医药发展规划》等都对加强中医药知识产权保护、推动中医药传统知识保护与现代知识产权制度有效衔接提出了明确要求。

据了解，立足新发展阶段，为深入学习贯彻党的二十大精神，不断满足中医药传承创新和中医药事业产业高质量发展的司法需求，进一步全面加强中医药知识产权司法保护工作，更好发挥法治固根本、稳预期、利长远的保障作用，有必要制定一部专门的司法文件。

“在《意见》起草过程中，我们深入贯彻习近平法治思想，坚持以人民为中心，坚持问题导向，开展了多层次、多形式的调研活动，广泛收集中医药行业的研究成果、知识产权典型案例、专题报告以及司法实践中存在的问题。不仅听取各级法院的意见，还专门邀请中医药相关领域的专家学者参加座谈会听取意见，广泛征求并充分吸收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科技部、中医药局、药监局、知识产权局等有关部门的意见建议。经过充分沟通、会商，在各方面形成广泛共识的基础上，多次修改完善，最终形成本《意见》。”上述负责人说，《意见》是关于中医药知识产权司法保护方面的专门文件，既全面覆盖中医药知识产权各领域和环节，又立足实践需要，突出重点和难点。

#### 为司法实践提供明确规则指引

《意见》分三个部分，共 16 条。引文及第一部分提出了加强中医药知识产权司法保护的总体要求，明确了指导思想和基本原则，确保中医药知识产权审判工作坚持正确的政治方向、树立正确的司法工作理念。

《意见》第 2 条基本原则指出，要坚持依法严格保护，正确适用民法典、知识产权部门法、中医药法等法律法规，切实维护社会公平正义和权利人合法权益，落实知识产权惩罚性赔偿，推动中医药创造性转化、创新性发展。坚持公正合理保护，合理确定中医药知识产权的权利边界和保护方式，实现保护范围、强度与中医药技术贡献程度相适应，促进中医药传承创新能力持续增强。

第二部分围绕强化中医药知识产权司法保护的审判职能，提升司法水平作出具体规定。主要包括 9 个条文，涵盖中医药专利、商业标志、商业秘密及国家秘密、著作权及相关权利、中药材资源、中药品种等各个领域的司法保护，加强中医药市场公平竞争秩序的维护，加强对中医药创新主体合法权益保护，加大对侵犯中医药知识产权行为的惩治力度。目的是聚焦中医药主要领域和重点问题，为中医药知识产权司法实践提供明确指引。

第三部分围绕深化改革创新，健全中医药知识产权综合保护体系提出具体措施。主要包括：完善中医药技术事实查明机制、加强中医药知识产权协同保护、提升司法服务保障能力、强化科技和信息化建设、加强国际交流合作。目的是回应中医药知识产权全链条保护的需求，积极推动构建中医药知识产权大保护格局。

### 建设更高水平的综合保护体系

党的二十大对推动中医药高质量发展提出了明确要求，中医药知识产权审判工作面临新形势新任务。

“我们将以《意见》的施行为契机，进一步加强中医药知识产权司法保护，促进中医药原始科技创新，推动中医药产业高质量发展。”最高法民三庭负责人表示，下一步将深化对新时代推进中医药传承创新发展重要性的认识，切实提高人民法院服务中医药发展国家战略的能力和水平，确保党中央的决策部署在人民法院不折不扣贯彻落实。找准中医药知识产权审判工作的切入点、结合点和着力点，勇于担当、积极谋划，不断提高中医药知识产权保护法治化水平。

记者了解到，人民法院将强化审判职能，为中医药高质量发展提供有力司法服务。立足增强自主创新能力，加大对中医药领域原始创新、智能制造关键技术、重大工程项目等的保护，强化司法裁判的规则引领和价值导向作用，切实维护中医药创新主体合法权益，不断优化促进中医药创新的知识产权法治环境。深化改革创新，不断提升中医药知识产权审判质量、效率和司法公信力。实施高水平知识产权审判机构建设工程，深化体制机制改革，强化智慧法院建设。坚持统筹推进国内法治和涉外法治，积极参与中医药领域国际知识产权规则制定，助力中医药高质量融入共建“一带一路”和走向世界。加强调查研究，结合中医药特点和发展规律，探索符合我国国情的知识产权司法保护规则和体系。

此外，还将加强统筹协调，推动建设更高水平的中医药知识产权综合保护体系。“中医药知识产权保护是一项系统工程，需要上下协同、内外联动、各方配合。加强中医药知识产权宣

传教育，及时发布典型案例，在全社会营造珍视、热爱、发展中医药的良好法治氛围。健全中医药知识产权多元化纠纷解决机制，完善技术事实查明机制，综合运用多种手段，发挥多主体作用，提升中医药知识产权保护效能。强化与相关单位协同配合，积极参与中医药知识产权全链条保护，促进健全行政保护与司法保护衔接机制，促进行政执法标准和司法裁判标准统一，推动形成中医药知识产权保护合力。建立健全与行政主管机关的数据交换，推动实现大数据共享和深度应用。强化审判队伍建设，加强知识产权法官的专业化培养和职业化选拔，努力造就一支政治坚定、顾全大局、精通法律、熟悉技术、具有国际视野的知识产权审判队伍。”上述负责人说。

## 06. 최고법 청위금융법원 사건 관할 사법해석 발표

출처: 인민법원보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청위금융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규정>은 청위금융법원이 관할하는 금융 민간상사사건, 금융 행정사건, 집행사건 등 3대 사건의 유형을 명확히 하였고 쓰촨과 충칭 두 지역 각급 법원의 금융사건 심급 관계를 구분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청위 금융법원은 충칭시와 쓰촨성이 청위 지역의 상청 경제권에 속하는 금융 사건에 대해 “응당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규정>은 청위 금융법원이 해외 관련 금융활동으로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관련 사건과 관할 구내 금융기초시설기관이 관련된 민사 사건에 대해 집중관할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最高人民法院发布《最高人民法院关于成渝金融法院案件管辖的规定》（以下简称《规定》），该规定自 2023 年 1 月 1 日起施行。《规定》进一步明确了成渝金融法院的案件管辖范围，对成渝金融法院正式运行和切实履行法定职能具有基础性制度保障作用。

成渝金融法院是我国第一家跨省级行政区域设立的金融专门法院。设立成渝金融法院，是贯彻落实党中央决策部署的具体举措，对服务保障国家金融战略实施，完善中国特色金融司法体系，维护金融安全，促进成渝地区双城经济圈建设健康发展具有重要意义。

为进一步明确成渝金融法院案件管辖的具体范围，《规定》认真贯彻落实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通过的《关于设立成渝金融法院的方案》和全国人大常委会作出的《关于设立成渝金融法院的决定》，牢固树立成渝地区双城经济圈一体化发展理念，立足“两地一个金融法院”的定位，突出成渝金融法院作为跨省域管辖的专门法院职能作用，确保两地金融案件裁判尺度的统一。

《规定》根据成渝金融法院跨省域管辖的职能定位，共设置了十一条内容，对成渝金融法院管辖的金融民商事案件、涉金融行政案件、执行案件等三大案件类型进行了全方位明确，对



四川、重庆两地各级法院金融案件的审级关系作出了划分。根据《规定》，成渝金融法院对重庆市以及四川省属于成渝地区双城经济圈范围内的金融案件，做到了“应管尽管”。

成渝金融法院管辖的金融民商事案件主要有，辖区内金融民商事纠纷、金融机构公司纠纷案件、金融机构破产案件、相关仲裁司法审查案件、申请承认和执行外国法院裁判案件等。成渝金融法院还对境外相关金融活动损害境内投资者合法权益的有关案件和辖区内金融基础设施机构所涉民商事案件，实行集中管辖。

成渝金融法院管辖的涉金融行政案件主要有，辖区内金融监管机构以及法律、法规、规章授权的组织所涉金融行政纠纷、辖区内金融基础设施机构所涉金融行政案件。

成渝金融法院管辖的执行案件主要有，负责执行其自身审理的第一审民商事案件和行政案件，审理由此引发的执行异议案件和执行异议之诉案件，审理辖区内基层法院执行金融案件过程中的执行复议案件和执行异议之诉上诉案件。

据了解，下一步，最高人民法院将进一步加强对成渝金融法院的监督指导，紧密结合跨省域金融法院实际，坚持改革创新，不断研究解决实践中的新情况新问题，高起点、高标准、高水平建设标杆性金融法院，推动成渝金融法院各项工作高质量发展。

## 07. 국가약품감독국 <의약품 온라인 판매 감독관리방법> 4 가지 문서 발표

출처: 약감독국사이트

**[내용개요:** 국가약품감독국관리국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 감독관리방법>의 이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규정 부록 6: 의약품 소매 유통 품질 관리>,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목록(제 1 판)>,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기 및 보고 업무 규범에 관한 공고> 등 4 개 문서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을 2022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은 효과적으로 인식을 높이고 <방법>의 홍보 및 교육을 수행; 중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방법>의 각 제도를 시행; 건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수행;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하는 등 4 가지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중 <통지>에 따르면 전자처방을 사용하여 개인에게 처방약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 또는 전자처방전 유통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처방의 출처가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

### 一、《药品网络销售监督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制定的背景是什么？

近年来，随着我国电子商务的快速发展，网购已成为常态化消费方式，药品网络销售活动也日趋活跃。为提升医疗卫生现代化服务水平，国务院先后出台一系列政策，要求创新服务模式，完善“互联网+”药品供应保障服务，满足人民日益增长的医疗卫生健康需求。2019 年新修订的《药品管理法》、2021 年 4 月《国务院办公厅关于服务“六稳”“六保”进一步做好“放管服”改革有关工作的意见》（国办发〔2021〕10 号）等，均对药品网络销售提出工作要求。

为贯彻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落实《药品管理法》要求，进一步规范药品网络销售行为，保障网络销售药品质量安全，确保人民群众用药可及，切实维护人民群众生命安全和身体健康，亟需出台《办法》。

### 二、《办法》制定的主要思路是什么？

《办法》聚焦保障药品质量安全、方便群众用药、完善药品网络销售监督管理制度设计等方面，对药品网络销售管理、第三方平台管理以及各方责任义务等作出规定。

《办法》坚持以下思路：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坚持人民至上、生命至上，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围绕保障药品质量安全、优化民生服务、方便群众购药等方面，全面加强药品网络销售监管。一是坚持便民惠民，以人民群众多层次多元化医疗健康需求为导向，依托互联网技术优势，提升药品可及性；二是坚持线上线下一体化原则，落实企业主体责任，引导行业依法依规健康发展；三是坚持以网管网，充分利用技术手段，实现技术赋能、智慧监管；四是坚持风险管理，以风险为导向科学开展制度设计；五是坚持“四个最严”要求，对药品网络销售违法违规行为予以严肃查处。

### 三、药品网络销售企业应具备哪些基本条件？

《办法》要求药品网络销售企业必须是线下实体药品企业，加强药品质量安全保障和消费者权益保障。《办法》规定，从事药品网络销售的，应当是具备保证网络销售药品安全能力的药品上市许可持有人或者药品经营企业。即药品上市许可持有人或者取得药品经营许可证的企业才能开展药品网络销售业务。

### 四、《办法》对第三方平台管理提出哪些要求？

第三方平台作为“平台管理者”，在药品网络销售活动中发挥着独特作用，是实现药品网络销售规范健康发展的关键一环。压实平台主体责任，强化平台内部管理，对于药品网络销售活动的规范和市场的有序发展至关重要。

《办法》对第三方平台管理作出了一系列规定。平台应当设立药品质量安全管理机构，建立并实施药品质量安全等管理制度，配备药学技术人员，按规定向所在地省级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应当加强检查，对入驻平台的药品网络销售企业药品信息展示、处方审核、药品销售和配送等行为进行管理，督促其严格履行法定义务。发现不具备资质销售药品等严重违法行为的，应当立即停止提供网络交易平台服务，停止展示药品相关信息。

## 五、药品网络销售监管的职权如何划分？

为强化药品网络销售监管，明确监管事权划分，《办法》在坚持属地监管原则的基础上，细化了药品监管部门在药品网络销售环节的监管事权，严格药品监督管理部门对个人信息和商业秘密的保密义务，做到权责清晰，确保药品网络销售监管工作落到实处。

国家药监局主管全国药品网络销售的监督管理工作。

省级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药品网络销售的监督管理工作，负责监督管理药品网络交易第三方平台以及药品上市许可持有人、药品批发企业通过网络销售药品的活动。











设区的市级、县级承担药品监督管理职责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药品网络销售的监督管理工作，负责监督管理药品零售企业通过网络销售药品的活动。

## 六、怎样加强药品网络销售监测？

《办法》明确，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药品网络销售监测工作。省级药品监督管理部门建立的药品网络销售监测平台，应当与国家药品网络销售监测平台实现数据对接。药品监督管理部门对监测发现的违法行为，应当依法进行调查处置。

药品网络销售的虚拟性、跨地域性等特点，给监督管理、执法管辖、案件调查、证据固定等带来新挑战。为适应新情况、解决新问题，国家药监局将坚持“以网管网”，发挥技术手段在保障药品质量安全方面的突出优势，充分利用药品网络销售监测平台，对药品网络销售活动持续加大监测力度，如发现违法违规行为，将依法依规严厉查处。

## 2. 최신법률법규 ( 별첨 )

01. <외국은행 지점의 종합감독관리 평가방법(시행)> 
02. <사이버보안표준 실무지침-개인정보 국경간 처리활동 보안인증규범 V2.0> 
03.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 
04. <산업 및 정보기술 분야의 데이터보완 관리조치 (시행)> 
05. <중의약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06. <청위금융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 
07. 《<의약품 온라인 판매 감독관리방법>의 이행에 관한 통지》 
08.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규정 부록 6: 의약품 소매 유통 품질 관리> 
09.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목록(제 1 판)> 
10.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기 및 보고 업무 규범에 관한 공고> 

### 3. 노동법문답

근무시간에 관한 질문 해답

- 토·일요일에 근무하면 반드시 초과근무로 보는지 여부?

답: 기업은 소재지의 전기, 수도, 교통 등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회 및 직원과 협의를 거쳐 매주 휴식일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휴무일은 토·일요일로 고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면 반드시 초과 근무로 보는지 여부?

답: 표준근무시간제도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1일 이상 휴식하는 것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로 볼 수 없음.

- 표준근무시간제도 이외의 다른 근무시간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의 한계로 인해 1일 8시간, 주 40시간 표준근무시간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비고정 근무제도 또는 종합계산 근무제도 등 기타 근무 및 휴식 방법을 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이 통과된 후 직원과 협상하여 근로계약서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범무법인[유] 지평